

탄핵 찬성파 색출 나선 국힘...국민 비판 목소리 외면

“국민 여론 외면하다 지지층 절반도 떠날 것” 불멘소리

권성동 “탄핵 직후 격앙됐던 분위기 누그러진 상황” 강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좀처럼 자성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하려 하거나 거칠게 비난하는 등의 행태는 국민 눈높이에 더욱 맞지 않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탄핵의 시발점이 된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에서 “(당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비난하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7명 중 한명이다.

실제로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지난 14일 의원 총회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비례 의원을 ‘제명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한 친윤계 의원은 소속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이재명과 민주당 부역자들은 달아내자”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호 전 전라기획부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의총장에서 한 명씩 고해성

사하지는 식으로 거의 인민재판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2차 탄핵안 표결에서도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던 것에 대한 비판론도 내부에서 제기된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우리가 탄핵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반대 당론’을 정하지 말고 의원들 개인의 소신에 맡겨야 했다”며 “우리당이 여전히 영남 중심의 당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중혁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결국 당을 그냥 ‘영남 자민련’으로 축소해버리고 권력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끼리는 푹푹 묻쳐서 지역에서 의원 배지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지지층도 설득하지 못하는 정지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용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10% 남짓인데, 국민의힘은 10명 중 한 명만 바라보고 정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지층도 절반은 떠나간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정치인이라면 자신들의 ‘탄핵

트라우마’보다 국민의 ‘계엄 트라우마’를 먼저 생각해야 했다”며 “탄핵 트라우마가 계엄 트라우마를 능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 가운데, 탄핵에 반대했던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의원들이 당 수습 전면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나선 상황이다.

반면에 앞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탄핵안 가결 후 열린 두 번의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마이크를 잡은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당 안팎에서는 반대파들의 원색적 비난이 찬성파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그런 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중대한 위헌행위냐 여부는 현재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탄핵 가결 직후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몇 의원이 감정을 표출했는데, 지금은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탄핵보다 분열이 더 무섭다고 강조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자고 호소했고, 많은 의원이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탄핵 찬성’ 김상욱 의원 비난 현수막 17일 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 교통섬에 설치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 현수막에 붉은색 글씨로 욕설이 적혀 있다. (김상욱 의원실 제공)

정부, 이번주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심의

이르면 내일 임시국무회의

정부는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 법안을 검토·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쟁점 법안들이 국가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

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를 국가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방 실장은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연합뉴스

국힘 비대위원장, 권성동·권영세·나경원 등 거론

오늘 의원총회서 결정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외부가 아닌 당 내 인사 중에서 선임하거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부 인사로 해야 한다는 안이 하나 있고, (당) 수습 기간에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두 가지 안이 있다”며 “18일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동훈

지도부’가 해체되면서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되었다.

비대위가 출범한다면 국민의힘 출범 이후 여섯 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비대위다. 전날 4선 이상 중진들은 회동에서 당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경륜이 있는 내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에 적합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의원총회에서도 위기 상황 수습, 비전 제시, 대야 관계에서의 공격력 등이 비대위원장의 요건으로 거론됐다. 비대위원장 내부 인사 후보군으로는 5선 중진인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과 원외계통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야당 주도 정국에 ‘당정 공조’로 대응 안간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연일 당정 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 여당의 존재감을 잃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 대북정책, 외교, 통상, 에너지를 포함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중요한 국정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는 행정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위기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김완식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난다.

탄핵안 가결 이튿날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고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정 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상임위법·현안별 당정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동시에 민주당을 겨냥한 ‘역공 모드’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연일 정조준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한번 부각했다.

국회 뒤편 헌법재판관 3인 추천의 문제를 놓고도 민주당과 각을 세웠다.

권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속도를 내려는 민주당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 등에서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1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상견례를 갖는다. 국방장관 및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尹, 탄핵안 가결 전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임명

시민사회2비서관 정호윤 등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지난주 대통령실 비서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선임 법률비서관에는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시민사회2비서관에는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임명됐다.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정 비서관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 사하을 예비후보로 나섰다. 공천받지 못한 뒤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2비서관은 지난달 장순철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발령받고 이동하면서 공석이였다. /연합뉴스